

5개월만에 광주 찾은盧대통령

“정계개편 길목 오해 살라” 조심조심

호남출신 비서진 빼고...정치적 해석 경계 서남해안 개발 구상 시비 우려 표명 안해

정계 개편의 길목에서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최근 회동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5개월만에 광주를 다시 찾았다. 7일 오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이 박람회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취지로 2년 전 출범한 연례 행사다.

하지만 여당발(發)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데다, 참여정부의 요람이자 호남의 심장부로서 '광주'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과 맞물리면서 노 대통령의 광주 방문에는 정치적 해석도 뒤따랐다.

노 대통령의 광주행은 지난 6월 1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에 참석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한 이후 약 5개월만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4일 전례 없이 김 전 대통령의 동고동 사지를 찾아가 북핵과 부동산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지 사흘 만에 이날 광주행이 이뤄졌다는 점도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는 대목이었다.

임기말 국정관리와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겨냥한 노 대통령의 '호남 겨안기'가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광주 방문은 8월에 결정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부산에 이어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같은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고, 이날 광주 방문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말이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노 대통령의 이날 광주행에는 관례와 달리 이병완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호남을 연고로 한 청와대 고위 인사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추사에서도 광주와 호남 발전에 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남해안권 개발에 관심 있는 이들은 전국 모든 시·도가 참석한 이날 행사 성격상 대통령이 특정지역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겨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정치적인 해석도 있다. 지난 4일 김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호남표 구애'라는 비난이 거센 터에 서남해안권 개발을 약속했다가는 또 다른 시비가 일 것이 뻔하므로 화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난 8월부터 복곡과 무안을 비롯한 서남해안을 집중개발하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이 이미 확인됐고, 노 대통령이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남해안권 개발 구상은 타이밍만 맞으면 언제라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행담도 사건으로 멈춰있는 'S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서남해안권 발전구상'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서남해안 개발 투자장' 형태의 별도 행정기관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청와대는 발표 시기와 형식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열고 있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한 관람객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자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체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법 방문 한승헌 사개추위원장

“法-檢 갈등 잘 풀면 건강한 사법풍토 도움”

“최근 법원과 검찰이 잇따라 갈등을 빚고 있지만 양측이 이 상황을 제대로 극복한다면 더욱 건강한 사법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

7일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한 한승헌(7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 위원장은 최근 의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벌이고 있는 영장 갈등에 대해 “생산적인 갈등이며,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법원과 검찰은 이전부터 영장 발부나 양형문제로 견해 차이를 보여왔고, 그것이 일시적 갈등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기 때문에 현재의 갈등은 그다지 걱정스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판중심주의 도입 비용 따질 일 아니다”

“로스쿨 입법 늦어지면 대학들 큰 혼란 빠질 것”

그는 “공판중심주의로 간다고 해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생산적인 갈등”이라며 “양측 입장의 차이와 견해의 차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의견차나 갈등을 극복해 나가면서 건전한 사법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서로 의견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소 비방적인 말이 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서로 상호 비방을 하는 등 감정싸움은 자제해야 한다”고 양측에 조언했다.

한 위원장은 또 법조계를 중심으로 공판중심주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재판이라는 것은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과 인력 등 경제적 문제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면서 “원가절감만을 따지면서 공정한 재판을 말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범죄와 피고가 범행을 시인하는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

고,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는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재판을 하게 되면 인력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로스쿨(법학대학원)법안과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대학이 혼란에 빠진다”면서 “시행 시기가 애초 2008년보다 늦더라도 빨리 입법이 이뤄져 시행시기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를 위한 모의재판 실시와 관련해서는



7일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한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모의재판을 해봤는데 관공 놀랄 만큼 국민의 의견이 성숙한 점을 볼 수 있었다”면서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등을 보면 당사행할 수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그동안 사개추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혁방안은 14개에 법률안인 26개에 달하지만, 정치권의 정쟁(政爭)으로 6개의 법률안이 입법 완료돼 안타깝다”면서 “사개추의 활동이 올 연말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20여 개의 법률안이 올 연말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신당 불가피” “신중히 접근해야”

광주·전남 與의원 회동 정계개편 논의

정치권의 정계개편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7일 광주와 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은 각기 오찬 회동을 갖고 정계개편 방향 및 내년도 지역 예산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광

주지역 의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려는 한편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계개편 움직임과 관련, 통합신당과로 분류되는 김태홍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보

다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일부 논의가 이뤄졌으나 별다른 합의가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날 모임에는 7명의 광주지역 의원 가운데 양형일, 김태홍, 강기정, 지병문 의원 등 4명이 참석한 데 그친 데다 통합과(양형일, 김태홍)와 관망파(강기정, 지병문)가 각각 2명씩 참석,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남지역 여당 의원 모임에서 유선호, 우윤근, 주승용 의원 등은 “통합신당은 불가피한 것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친노직계인 서갑원 의원은 “통합신당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은 탈당설과 관련,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는 한편, 정계개편 논의와 관련, “전남지역 의원들이 앞장선다면 지역정당 회귀 등 부정적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지역 의원들은 매주 1차례 이상 모여 정계개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